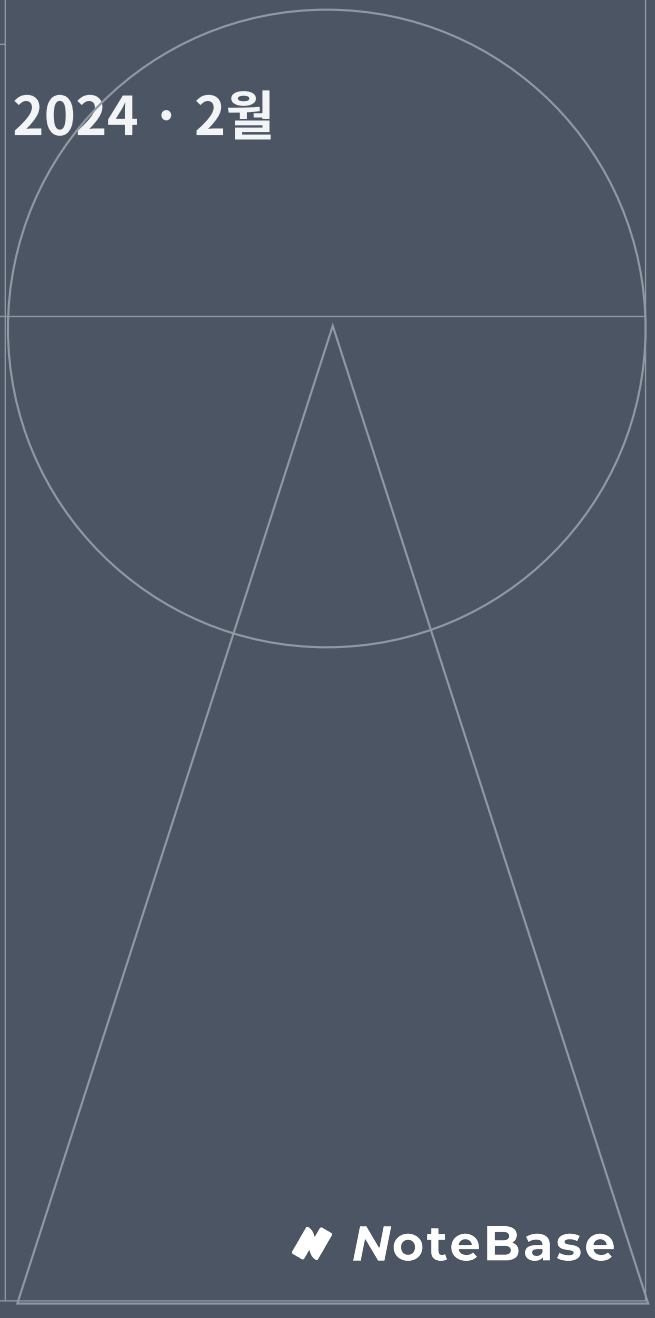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4 · 2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4 · 2월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4 · 2월

문 1. <보기>에서 설명하는 주민 참여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해당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① 주민소환제
② 주민공청회
③ 주민투표제
④ 주민참여예산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주민이 선출한 지방공직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가 주민소환제이다. 보기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임기 중 투표로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대상이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보기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무 태만을 한 공직자를 주민의 투표로 해임한다는 부분이 주민소환제의 특징을 보여 준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확정된다. 앞의 기준은 전체 투표권자 중 얼마나 투표했는지를, 뒤의 기준은 유효한 표 중 얼마나 소환에 찬성했는지를 뜻한다. 보기는 이러한 주민소환의 확정 요건까지 제시하고 있다.

NoteBase

문 2. 우리나라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은 제출 또는 발의된 법률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본회의 전 심사하도록 한다.

③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의결한 날로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고쳐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따라서 법률안의 제안은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O: 국회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법률안을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법률안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③ O: 헌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적인 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재적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적을 둔 의원 전체이고, 출석 의원은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의원이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X: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 의결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이고, 공포는 법률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므로 두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 법률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NoteBase

문 3.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A기업의 직원 갑(甲)은 근로 조건의 개선을 주장하며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주관한 쟁의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A기업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갑을 해고하였다. 이에 갑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였다.

① 갑은 A기업으로부터 근로 3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A기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갑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가 끝나야만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갑뿐만 아니라 갑이 소속된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구제 절차가 끝나야만'이 잘못되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갑은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단결권,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가 단체교섭권, 쟁의행위 등 집단행동을 할 권리가 단체행동권이다. 갑은 노동조합이 주관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므로, 근로 3권 중 특히 **단체행동권의 침해**를 주장한 것이다.

② O: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포함**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A기업은 그 판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③ X: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행정적 구제 절차이고, 해고 무효확인소송은 사용자인 A기업을 상대로 해고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민사소송이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갑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제 절차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구제 절차가 끝나야만'을 '구제 절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도'로 고쳐야 한다.

④ O: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갑뿐 아니라 갑이 소속된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NoteBase

문 4.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을(乙)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일 년 뒤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① 갑은 1,100만원을 받을 권리만 발생하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갑과 을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을 것이다.
③ 갑과 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갑이 만약 미성년자라면 행위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갑이 돈을 빌려주고 을이 일 년 뒤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계약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는 뜻이다. 계약은 체결을 제안하는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이 합치하여 성립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약정한 1,000만 원을 을에게 **빌려줄 의무도 발생한다**(민법 제598조). 갑은 이를 이행한 뒤 일 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한 1,100만 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미 돈을 빌려주어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과 처음부터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다.

② O: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는 의사표시이고, 승낙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이다. 갑과 을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일 년 뒤 1,1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했으므로, 그 내용에 관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X: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구두로 약정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차용증 등 문서는 나중에 대여 금액이나 상환 기한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약정 내용을 입증하는 데 유용하지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

④ X: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민법 제5조). 동의를 받아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고, 동의 없이 체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NoteBase

문 5. <보기 1>에 대한 법적 판단 중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 A(만 18세)와 B(만 18세)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 신고를 하였다.
• C(만 36세)와 D(만 33세)는 결혼식을 올린 뒤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E(만 33세)와 F(만 32세)는 혼인하여 어린 자녀가 있다. E가 악의로 F를 유기하여 이혼을 하였다. 양육권은 F가 갖기로 하였다.

<보기 2>
ㄱ. A와 B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성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 C와 D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E에게 면접교섭권이 발생한다.
ㄹ. E는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혼인에 따른 **성년 의제는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의 책임이 있더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E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A와 B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이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본다. 이는 독립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법 등 사법 관계에서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에는 성년 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법에 따른 청소년 여부는 혼인 여부가 아니라 별도의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ㄴ. X: C와 D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은 식료품 구입 등 통상적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정된다**(「민법」 제827조제1항의 유추적용). 따라서 C와 D 사이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이 발생한다.

ㄷ. O: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를 가진다. 양육권을 F가 갖기로 하였으므로 E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이혼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ㄹ. X: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따라서 E가 악의로 F를 유기하여 이혼에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그 이유만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별된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므로, 두 보기를 고른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조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③ 국제 관습법의 예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④ 조약과 국제 관습법 모두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조약은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상 합의이다. 국제기구는 설립 목적과 해당 기구의 규칙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가 문서로 맺는 국제법상 합의이다. 국가는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제기구도 **설립 목적과 해당 기구의 규칙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X: 법의 일반원칙은 여러 국가의 법체계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법 원칙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은 이를 조약·국제 관습법과 함께 재판에 적용할 법원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준거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준거로 활용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이 문항의 법원 구분에서 **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한다. 신의성실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권리남용금지는 권리를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국제 관습법은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행이 법적 의무라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④ X: 조약은 원칙적으로 **그 조약의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에 따라 제3국의 동의 없이 그 국가에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반면 일반 국제 관습법은 특정 조약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두 법원 모두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문 7. <보기 1>은 제○○회 국회(정기회) 일정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9. 1.	개회식
9. 4. ~ 9. 7.	국정에 관한 ㉠ 교섭단체 대표 연설
9. 11. ~ 9. 14.	대정부 질문
9. 21.	㉡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
9. 22. ~ 9. 27.	법률안 제정 및 개정 활동
10. 12. ~ 10. 31.	㉢ 국정감사
12. 1.	㉣ 예산안 심의

<보기 2>

ㄱ. ㉠은 국회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한다.

ㄴ. 국회는 ㉡을 통해 정부를, ㉢을 통해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ㄷ. ㉣은 재정에 관한 권한이다.

ㄹ. 국회가 ㉣을 하기 전에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다.

① ㄱ,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예산안 심의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검토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다. 예산안은 **행정부가 먼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확정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은 교섭단체이다.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과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므로, '10인 이상'을 '20인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이 모여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ㄴ. X: ㉡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이고, ㉢은 국정감사이다.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국회는 이 동의권으로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여 **법원을 견제**한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헌법 제61조 제1항). 보기에서는 두 권한의 견제 대상을 서로 바꾸어 설명했다.

ㄷ. O: ㉣은 예산안 심의이다.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가 거둘 수입과 사용할 지출의 계획이다. 국회가 이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통제하는 권한**에 해당한다(헌법 제54조 제1항).

ㄹ. O: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예산안의 **행정부 편성·제출이 국회 심의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국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하여 심의·확정한다.

옳은 보기는 ㄷ과 ㄹ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8. <보기>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기본 원리	관련 헌법 조항
(가)	헌법 제6조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나)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가)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② (가)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쳐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나)는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④ (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을 규정하므로 국제 평화주의에 해당한다. (나)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므로 복지 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① X: 국제 평화주의에 따라 부인하는 것은 모든 전쟁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이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국제 평화의 유지와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규정한다. 외부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 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② X: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은 맞지만, '국회 비준'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헌법 제73조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정해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한 체결·공포를 요건으로 한다.

③ O: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 두어서는 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 불평등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 원리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헌법 제119조 제2항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등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④ X: 복지 국가의 원리가 강조된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이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이를 계승하면서 사회권 보장과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NoteBase

문 9. <보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① A는 집행유예라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②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다.
③ A는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하고, 3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④ 사회봉사 명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과하는 형벌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검사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기간 내에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집행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다(형법 제62조). A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며, 집행유예를 무죄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② O: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항소**이며,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다(같은 법 제358조). 따라서 검사는 A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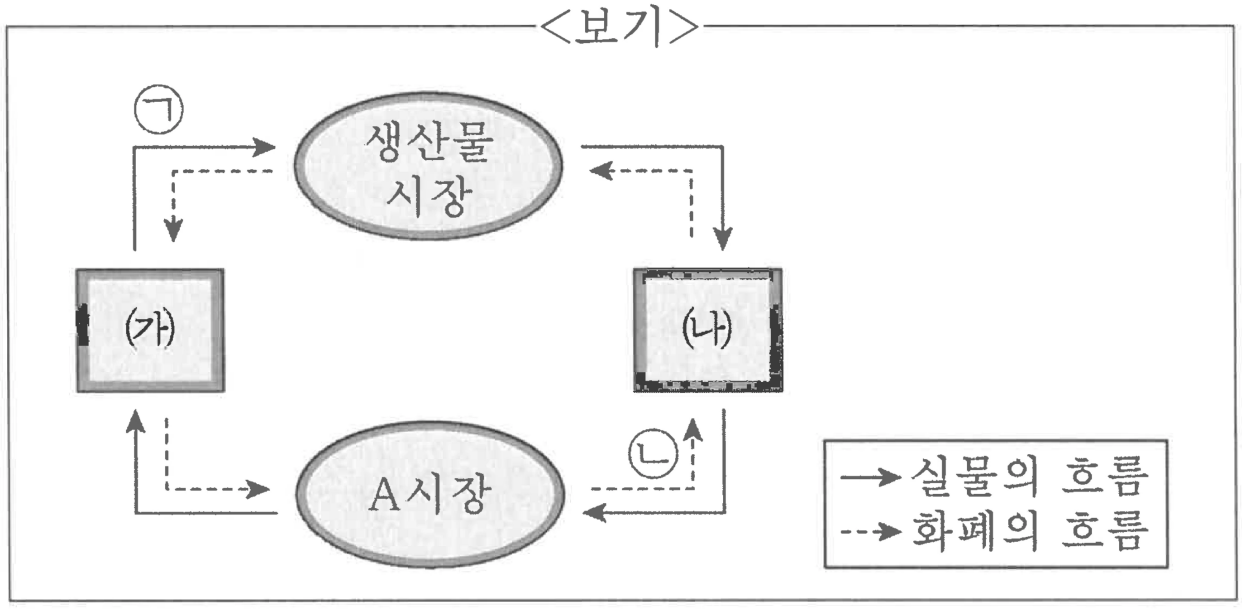
③ X: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먼저 2년을 복역한 뒤 3년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는 뜻이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5조).

④ X: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 부과하는 강제적 조치라는 점은 맞지만, 사회봉사 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다.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따라서 A는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명령받은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NoteBase

문 10. <보기>는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가)는 가계이다.

② A 시장에서 (나)는 수요자이다.

③ ㉠을 통해 (나)는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④ 회사원이 임금을 받는 것은 ㉡의 사례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은 가계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의 흐름**이다. 회사원이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은 여기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생산물 시장으로 향하는 실선 화살표는 (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는 **기업**이고, 생산물을 구입하는 (나)가 가계이다.

② X: A 시장은 가계인 (나)에서 기업인 (가)로 실물이 이동하는 **생산 요소 시장**이다. 가계는 노동·토지·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기업은 이를 수요하므로, (나)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이다.

③ X: ㉠은 기업인 (가)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공급하는 흐름이다. 부가 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진 가치로, 이 모형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나)가 아니라 (가)**이다. (나)는 생산물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가계이다.

④ O: ㉡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인 (나)로 향하는 점선 화살표이므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인 **소득의 흐름**이다. 회사원이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가 기업에서 가계로 지급되는 사례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재는 수요와 공급법칙을 따르며 소득은 변함이 없다.)

<보기>
· A재와 B재는 용도가 비슷하여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연관 관계에 있다.
· A재와 C재는 각각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연관 관계에 있다.

① A재의 공급 증가는 B재의 수요 증가요인이다.
② A재의 공급 감소는 C재의 수요 증가요인이다.
③ A재의 생산 비용 감소는 B재의 수요 증가요인이다.
④ C재의 생산자 수 감소는 A재의 수요 감소요인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A재와 C재는 함께 소비하는 **보완재**이다. C재의 생산자 수가 줄면 공급 감소로 C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함께 소비하는 A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A재와 B재는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재이고, A재와 C재는 함께 소비할 때 만족이 커지는 보완재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의 수요는 증가하고 보완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가격이 내리면 반대로 움직인다.

① X: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A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A재를 더 구입하려 하므로, 대체재인 **B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수요 증가요인'을 '수요 감소요인'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A재의 공급이 감소하면 A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A재의 소비가 줄어들면 함께 소비하는 보완재인 **C재의 수요도 감소**한다. 따라서 '수요 증가요인'을 '수요 감소요인'으로 고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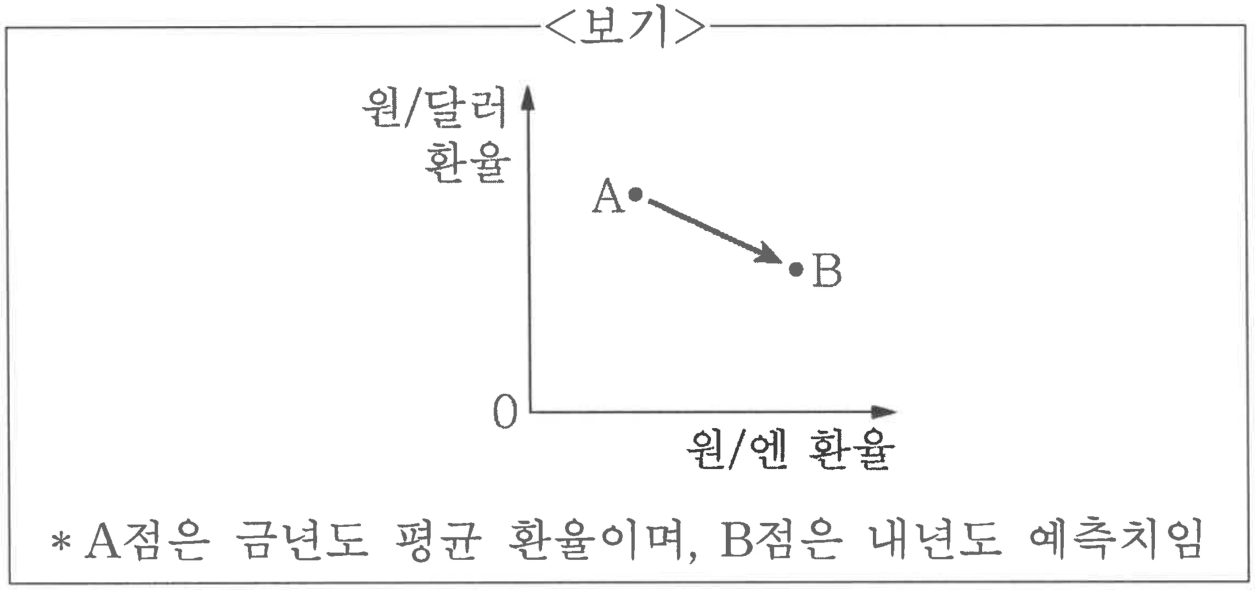
③ X: A재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같은 가격에서 생산자가 공급하려는 양이 늘어 **A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A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대체재인 B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생산 비용 감소는 B재의 수요 증가요인이 아니라 감소요인이다.

④ O: C재의 생산자 수가 감소하면 시장 전체의 공급이 줄어 C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C재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함께 소비하는 **보완재 A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이는 A재 자체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아니라, 관련 재화인 C재의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의 수요 변화이다.

NoteBase

문 12. <보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나타날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 A점은 금년도 평균 환율이며, B점은 내년도 예측치임

① 한국에서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②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③ 일본으로 떠나는 한국 국민의 경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④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이익은 감소할 것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 원/엔 환율이 올라 **같은 엔화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 여행에서 같은 금액의 엔화를 지출하더라도 원화로 부담하는 경비는 늘어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A점은 금년도 평균 환율이고 B점은 내년도 예측치이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 세로축의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가로축의 원/엔 환율은 상승한다. 즉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는 줄고, 1엔을 사는 데 필요한 원화는 늘어난다.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는 가치가 상승하고, 엔화에 대해서는 가치가 하락한다.

① X: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같은 미국 상품을 **더 적은 원화로 구매**할 수 있다. 미국 상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낮아지므로, 한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

② X: 원/엔 환율이 상승하면 엔화로 표시된 가격이 같은 일본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진다. 한국 소비자가 일본 제품을 사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므로,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③ O: 일본 여행에서는 숙박비·식비 등을 엔화로 지출한다. 원/엔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금액의 엔화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원화가 늘어나므로**, 일본으로 떠나는 한국 국민의 경비 부담이 증가한다.

④ X: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원화 비용은 줄어든다. 또한 원/엔 환율 상승으로 같은 엔화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늘어난다. 따라서 **부품 구입 비용은 줄고 원화 환산 수출 수입은 늘어**, 한국 기업의 이익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

NoteBase

문 13. <보기>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요구불 예금과 주식 중 하나이고, (가)와 (나)는 각각 수익성과 유동성 중 하나이다.)

<보기>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A>B로 나타나며,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기준	비교 결과
(가)	A>B
(나)	A<B

① A는 B와 달리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② B는 A와 달리 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증서이다.

③ (가)는 수익성이다.

④ (나)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A는 요구불 예금이고, B는 주식이다. **주식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주주는 이를 통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안전성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이다. 주식은 주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요구불 예금보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낮다. 따라서 안전성이 A > B라는 조건에서 A는 요구불 예금, B는 주식으로 판단한다.

① X: A는 요구불 예금이므로 배당수익을 기대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B인 주식**이다. 요구불 예금에서는 예금 조건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② O: B인 주식은 **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증서**이다. 기업은 주식 발행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지분을 갖는다. A인 요구불 예금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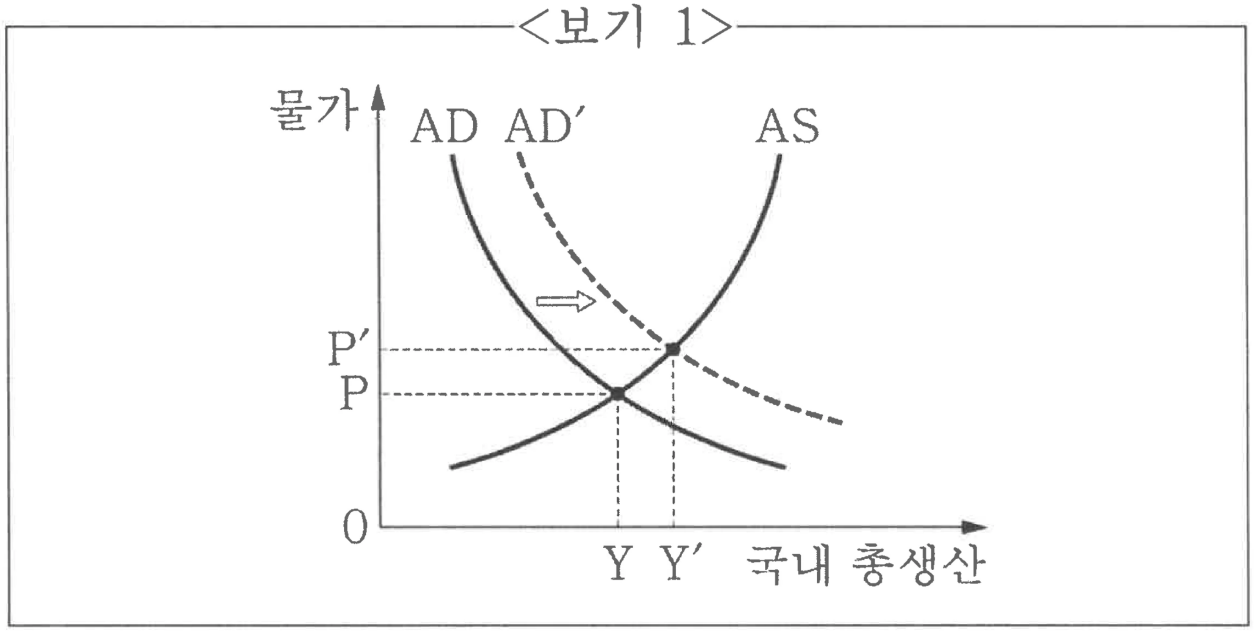
③ X: (가)는 **유동성**이다. 유동성은 자산을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이다. 요구불 예금은 예금자가 원할 때 인출할 수 있어, 매도 과정을 거쳐 현금화하는 주식보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다. 따라서 A > B인 (가)는 유동성이고, 수익성은 A < B인 (나)에 해당한다.

④ X: (나)는 **수익성**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이자·배당·시세 차익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이다. 주식은 요구불 예금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익성은 A < B로 나타난다. 선지의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는 수익성이 아니라 **안전성**의 의미이다.

NoteBase

문 14. <보기 1>과 같은 총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D는 총수요, AS는 총공급을 의미한다.)

<보기 1>



<보기 2>

ㄱ. 수출의 감소 ㄴ. 가계 소비의 증가

ㄷ. 기업의 투자 감소 ㄹ. 정부의 지출 증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총수요 곡선이 AD에서 AD′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은 **총수요의 증가**를 뜻한다.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각 물가 수준에서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지출이 늘어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의 세로축은 물가, 가로축은 국내 총생산이다. 총수요 곡선이 AD에서 AD′로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므로, 같은 물가 수준에서 재화·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한 상황이다. 총수요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로 구성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 구성 요소의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고, 감소는 총수요를 줄인다.

ㄱ. X: 수출이 감소하면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줄어든다. 수입이 일정할 때 순수출이 감소하므로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림과 같은 오른쪽 이동의 요인은 수출의 증가이다.

ㄴ. O: 가계 소비가 증가하면 가계가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지출이 늘어난다. 소비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ㄷ. X: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면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려는 지출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수요가 감소하여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림과 같은 오른쪽 이동의 요인은 기업 투자의 증가이다.

ㄹ. O: 정부가 재화·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총수요 곡선이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림과 같은 총수요 증가의 요인은 ㄴ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보기 1>은 질문 (가)~(다)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A, B를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만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중 하나이다.)

<보기 1>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구분	A	B
(가)	예	예
(나)	예	아니요
(다)	아니요	예

<보기 2>

ㄱ. (가)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ㄴ. (나)가 '능력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납부하는가?'라면, (다)에는 '사후 처방적 성격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ㄷ. B가 사회 보험이라면 (나)에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ㄹ. (다)가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띠는가?'라면, (나)에는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ㄴ의 조건에서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이므로, (다)의 응답은 표와 반대가 되어야 한다. ㄷ의 **상호 부조**도 사회 보험의 원리이므로, B가 사회 보험이면 (나)의 응답은 표와 반대가 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에서 (가)는 A와 B가 모두 '예', (나)는 A만 '예', (다)는 B만 '예'이다. 따라서 (가)에는 두 제도의 공통점을, (나)와 (다)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제도를 구별하는 질문을 넣어야 한다.

ㄱ. O: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는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사회 보험은 소득 등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재분배한다. 따라서 두 제도가 모두 '예'인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ㄴ. X: 능력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사회 보험의 특징이다. 공공 부조는 수급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나)의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이다. 사회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미리 모으므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 부조는 이미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을 지원하므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제시된 질문에 대한 응답은 A가 '예', B가 '아니요'여야 하므로 (다)의 응답과 반대이다. (다)에는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ㄷ. X: 상호 부조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함께 모아 사회적 위험을 겪는 사람을 돕는 **사회 보험의 원리**이다. 공공 부조는 가입자 간의 상호 부조보다 국가의 책임에 따른 생활 보장을 바탕으로 한다. B가 사회 보험이면 A는 공공 부조이므로, 제시된 질문의 응답은 A가 '아니요', B가 '예'이다. 이는 (나)가 아니라 (다)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다.

ㄹ. O: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는 **선별적 복지**는 공공 부조의 특징이다. (다)에서 B가 '예'이므로 B는 공공 부조, A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보험은 법정 가입 대상자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 부조는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에 A는 '예', B는 '아니요'라고 답하므로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ㄴ, ㄷ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진리의 행보는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사회과학의 경계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사회과학의 구획이란 자연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학문도 그렇듯이 사회과학이란 진리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그때그때 편의대로 만든 것일 뿐이다. 진리는 직선으로, 또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여러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 진리의 한 부분만을 붙들고 평생 씨름하고 있다. 이제는 진리의 행보를 따라 과감히, 그리고 자유롭게 사회과학의 국경을 넘나들 때가 되었다.

①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어렵다.
② 복잡한 사회문화 현상은 단순화시켜 이해해야 한다.
③ 사회과학 각 분야별 전문성 확립이 시급하다.
④ 사회과학 연구에서 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사회과학의 분야 구분은 인간이 편의상 만든 것이므로, 한 분야의 경계에 갇히면 사회 현상의 일부만 파악하게 된다. 여러 분야의 관점을 연결해 현상을 이해하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제시문은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울타리 안에 갇혀 진리의 한 부분만을 붙들고' 있다는 표현은 **개별 학문에 갇힌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연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② X: 제시문의 핵심은 복잡한 사회문화 현상을 단순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 분야에서 현상의 일부만 보는 태도를 비판하므로, 현상을 단순화하기보다 **여러 학문 분야의 관점을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③ X: 분야별 전문성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글은 아니지만, 전문성 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아니다. '사회과학의 국경을 넘나들 때'라는 표현은 각 분야의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 간 교류와 통합**을 강조한다.

④ O: '사회과학의 구획'은 인간이 편의상 만든 것이고 진리는 그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이 제시문의 전제이다. 따라서 한 학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학문의 관점을 종합**하여 사회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보기>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회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① 사회는 개인의 속성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②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③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특성을 탐구해야 한다.
④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강조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개인들의 특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사회 명목론**의 설명이다. 제시문은 뛰어난 개인도 조직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므로, 개인의 특성보다 **사회 구조와 제도의 영향**을 중시하는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제시문은 뛰어난 직원도 조직 문화에 따라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능력보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중시하므로 사회 실재론의 관점이다.

① O: 사회 실재론은 사회를 **개인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 본다. 제시문에서도 조직 문화가 직원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② O: 사회 실재론은 사회에 **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이 있다고 본다. 뛰어난 직원을 확보하더라도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③ X: 개인들의 특성을 탐구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관점이다. 제시문의 사회 실재론은 개인의 특성만을 분석하기보다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제도·문화의 특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O: 사회 실재론은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강조한다. 제시문이 회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직원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 문화의 개선을 더 시급하게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1960년대에 ㉠동생의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독일로 떠났다. 당시 정부는 심각한 실업 문제 해결과 외화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독(派獨) ㉡광부 모집에 나섰다. 갑은 그야말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처리가 늦어지자 ㉢독일인 광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 1970년 9월, "일하기 싫으면 한국으로 가라"는 독일인들의 야유를 받고 폭행을 당한 파독 광부들이 파업을 하자 ㉣갑은 참여 여부를 고민하다 결국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후 ㉤갑은 임금 문제로 독일인 감독관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그의 모함으로 카메라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상황을 잘 모르는 ㉥광부 자치위원회는 "한국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갑에게 라인 강에 투신자살할 것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사와 경찰은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작전을 펼쳐 운하에 빠진 갑을 구출했다.

① ㉠은 ㉡과 달리 성취지위에 해당한다.
② ㉢은 갑의 역할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
③ ㉥, ㉦은 모두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④ ㉣과 ㉤은 갑의 역할갈등에 해당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광부 자치위원회와 언론사는 모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므로 이익 사회이다. 이익 사회의 '이익'은 경제적 이윤만을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동생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가족 관계에 따라 주어지는 **귀속 지위**이다. ㉡ 광부는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얻는 **성취 지위**이다. 선지는 두 지위의 유형을 반대로 설명했다.

② X: 역할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이고, 역할 행동은 그 역할을 개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에서 갑이 무시를 당한 것은 일처리가 늦었다는 **역할 행동에 대한 부정적 제재**이다. 광부에게 기대되는 역할 자체에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다.

③ O: 이익 사회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적·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 광부 자치위원회는 광부들의 공동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 언론사는 취재·보도 등의 활동을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모두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이익 사회의 기준은 **경제적 이윤 추구 여부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결합**이다. 가족처럼 자연발생적이고 친밀한 유대 자체를 중시하는 공동 사회와 구별된다.

④ X: 역할 갈등은 한 개인이 가진 서로 다른 지위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갈등이다. ㉣의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한 고민만으로는 어떤 지위의 역할들이 충돌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은 임금을 둘러싼 갑과 독일인 감독관 사이의 대인 갈등이다. 따라서 개인의 고민이나 타인과의 갈등을 모두 역할 갈등으로 볼 수 없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세 가지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일탈 이론	특성 정리
(가)	일탈자라는 정체성이 새로운 일탈 행동을 낳게 된다.
(나)	일반적 일탈 기준과 다른 규범을 내면화한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다)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자원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일탈적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① (가)는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② (나)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다)는 최초의 일탈 행위의 원인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무관한 개인의 성격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사회적 낙인을 통해 형성된 **일탈자라는 정체성**이 새로운 일탈로 이어진다고 보는 낙인 이론이다. 처음의 일탈 자체보다 **사회적 반응 이후 일탈이 지속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에서 (가)는 일탈자라는 정체성이 새로운 일탈을 낳는다는 점에서 낙인 이론, (나)는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 교제 이론이다. (다)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① O: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 이후의 사회적 낙인**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1차적 일탈은 일탈자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의 일탈이다. 이후 주변에서 일탈자로 낙인찍으면 당사자가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일탈을 지속·반복할 수 있는데, 이를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② X: 차별 교제 이론은 사회의 지배적 규범에 비추어 일탈을 구분하며, 일탈에 우호적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학습한다고 본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인 (가)**이다. 낙인 이론은 행위 자체의 속성보다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일탈 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③ X: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목표를 달성할 합법적 수단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긴장으로 일탈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성공을 요구받지만 합법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부족한 사람이 불법적 수단을 택하는 경우이다. **최초의 일탈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낙인 이론인 (가)**에 해당한다. 낙인 이론은 최초의 일탈이 왜 발생했는지보다 그 이후의 사회적 반응과 추가 일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④ X: 낙인 이론은 개인의 성격보다 **타인의 낙인과 그에 따른 정체성 변화**를 중시한다. 일탈자로 규정하는 타인의 반응을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상호작용이 일탈의 지속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무관한 성격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보기 1>의 사회 변동 이론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사회 변동 방향을 기준으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A와 B가 있다. A는 사회가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미분화된 사회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로 변한다고 본다. B는 사회가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보기 2>
ㄱ. A는 현재 사회가 변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ㄴ. B는 장기적 측면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ㄷ.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 과정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한다.
ㄹ. A는 사회 변동과 진보를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A는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발전한다고 보는 진화론으로, **사회 변동을 곧 진보로 본다**는 비판을 받는다. B는 사회의 생성·성장·쇠퇴·소멸이 되풀이된다고 보는 순환론이므로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A는 사회가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일정한 방향을 따라 발전한다고 보는 진화론이다. B는 사회가 생성·성장·쇠퇴·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순환론이다.

ㄱ. X: 현재 사회가 변동 과정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순환론 B**에 해당한다. 순환론은 사회가 성장과 쇠퇴를 반복한다고 보지만, 현재가 그 순환의 어느 단계인지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진화론 A는 단순함과 복잡함, 미분화와 분화 등의 기준으로 사회의 발전 단계를 설명한다.

ㄴ. O: 순환론 B는 사회의 성장과 쇠퇴가 되풀이된다고 보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사회가 계속 발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진화론과 구별된다.

ㄷ. X: 순환론 B도 진화론 A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두 이론 모두 사회 변동을 일정한 발전 방향이나 반복 과정에 따라 설명하므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변동의 방향을 바꾸는 **능동적 역할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ㄹ. O: 진화론 A는 사회가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변하는 것을 발전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사회 구조가 달라지는 현상인 **사회 변동을 더 나은 상태로의 진보와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 변동이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를 묶은 조합은 ③이다.

NoteBase